제360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5월17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1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1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
16.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현안보고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가. 외교부 소관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최운열・문희상・어기구・권미혁・노웅래・김병욱・박광온・김영호・김한정・강병원・심재권 의원 발의) ····· 4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함진규・송희경・이종명・김재경・민경욱・윤종필・이채익・주호영・성일종 의원 발의) ····· 4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이인영・김상희・신동근・신창현・전재수・정성호・조승래・이춘석・전해철・손혜원・설훈・김병욱 의원 발의) ····· 4
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기동민・김영호・김정우・노웅래・박정・심재권・원혜영・윤관석・이철희・정성호 의원 발의) ····· 4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4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장석춘・이헌승・김규환・김성찬・김진태・김성원・강효상・송희경・홍일표・이종명 의원 발의) ····· 4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 4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 4
1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유기준・이진복・원유철・이동섭・金成泰・김광림・김태흠・윤종필・권석창・이완영・정용기・최연혜 의원 발의) ····· 4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종회・손금주・윤영일・이용호・장정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평)・최도자 의원 발의) ····· 4
1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박선숙・인재근・박지원・기동민・주승용・박주현・장정숙・김현권・윤영일・천정배・노웅래・최경환(평)・김관영 의원 발의) ····· 4
1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김두관・심기준・문희상・최운열・강훈식・오영훈・신창현・김상희・기동민・박경미・김한정・박정・김해영・박광온・서영교・김영호・김현권・임종성・김철민・김병욱・안호영・박재호・김정우・이수혁・김종민・이용호・천정배・신동근・유동수・이춘석・노웅래・유은혜・고용진・소병훈・전해철・어기구・이훈・손혜원・유성엽・조정식・백재현・강병원 의원 발의) ····· 4
1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홍철호・이명수・이학재・김명연・유의동・박덕흠・윤영일・김두관・김승희・안상수 의원 발의) ····· 5
16.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진・김기선・김성원・김정재・문진국・박대출・박맹우・엄용수・염동열・윤종필・이만희・이양수・이헌승・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5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승희・박맹우・성일종・박성중・이진복・여상규・원유철・이채익・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5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주승용・노웅래・손금주・신창현・김민기・조배숙・김관영・이종걸・문희상・송기석・장병완・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5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 5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원혜영·김정우·박정·송옥주·이수혁·인재근·신창현·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5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고용진·손혜원·안호영·박찬대·조승래·노웅래·윤관석·이춘석·박주민·추미애·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5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신창현·유은혜·기동민·전해철·김정우·김종대·위성곤·송옥주·이해찬 의원 발의)(계속) ····· 5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 5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5
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5
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정유섭·성일종·김선동·김상훈·정진석·원유철·유기준·윤상직·김진태·여상규·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5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권은희·김정우·손금주·노웅래·조승래·이찬열·정춘숙·이종걸·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5
28. 현안보고 ····· 16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3
가. 외교부 소관
28. 현안보고(계속) ····· 34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지난 수년간의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함은 물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금년 내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대 전기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관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판문점 선언의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핵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연계된 문제는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

착에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5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결정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로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태도와 조치를 이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가 오늘 전체회의 중에 실시되는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에 대한 상정과 소위 회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의결 시까지 의석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최운열·문희상·어기구·권미혁·노웅래·김병욱·박광온·김영호·김한정·강병원·심재권 의원 발의)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함진규·송희경·이종명·김재경·민경욱·윤종필·이채익·주호영·성일종 의원 발의)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이인영·김상희·신동근·신창현·전재수·정성호·조승래·이춘석·전해철·손혜원·설훈·김병욱 의원 발의)
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기동민·김영호·김정우·노웅래·박정·심재권·원혜영·윤관석·이철희·정성호 의원 발의)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장석춘·이헌승·김규환·김성찬·김진태·김성원·강효상·송희경·홍일표·이종명 의원 발의)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1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유기준·이진복·원유철·이동섭·金成泰·김광림·김태흠·윤종필·권석창·이완영·정용기·최연혜 의원 발의)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종회·손금주·윤영일·이용호·장정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평)·최도자 의원 발의)
1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박선숙·인재근·박지원·기동민·주승용·박주현·장정숙·김현권·윤영일·천정배·노웅래·최경환(평)·김관영 의원 발의)
1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김두관·심기준·문희상·최운열·강훈식·오영훈·신창현·김상희·기동민·박경미·김한정·박정·김해영·박광온·서영교·김영호·김현권·임종성·김철민·김병욱·안호영·박재호·김정우·이수혁·김종민·이용호·천정배·신동근·유동수·이춘석·노웅래·유은혜·고용진·소병훈·전해철·어기

구·이훈·손혜원·유성엽·조정식·백재현·강병원 의원 발의)

1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홍철호·이명수·이학재·김명연·유의동·박덕흠·윤영일·김두관·김승희·안상수 의원 발의)

16.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진·김기선·김성원·김정재·문진국·박대출·박맹우·엄용수·염동열·윤종필·이만희·이양수·이헌승·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승희·박맹우·성일종·박성중·이진복·여상규·원유철·이채익·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주승용·노웅래·손금주·신창현·김민기·조배숙·김관영·이종걸·문희상·송기석·장병완·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원혜영·김정우·박정·송옥주·이수혁·인재근·신창현·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고용진·손혜원·안호영·박찬대·조승래·노웅래·윤관석·이춘석·박주민·추미애·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신창현·유은혜·기동민·전해철·김정우·김종대·위성곤·송옥주·이해찬 의원 발의)(계속)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이동섭·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주승용·박지원·장정숙·이찬열·윤영일·정동영·인재근·김관영·원혜영·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정유섭·성일종·김선동·김상훈·정진석·원유철·유기준·윤상직·김진태·여상규·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권은희·김정우·손금주·노웅래·조승래·이찬열·정춘숙·이종걸·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4시08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지난 2월 2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까지 청취하였습니다만 대체토론이 종료되지 않아 오늘 계속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신규 의안과 함께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각각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외교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및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94억 1700만 원을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265명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 그리고 41명의 개발협력 인재를 해외로 추가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개발협력 현장 경험

을 직접 체득하고 개발협력을 포함 국제 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키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KOICA는 이들의 현지 경험이 국내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 번호,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고, 등록자가 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보다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해외봉사단원 등의 파견 인원을 당초 계획 인원 2077명 대비 306명을 증원할 계획인바 이 중 265명은 해외봉사단원이고 나머지 41명은 다자협력 전문가 및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개도국 지역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귀국 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해외봉사단 파견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해외 봉사활동 지원자 감소가 그 주된 사유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봉사단 확대·운영 그 자체를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외봉사단 활동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소관 4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출국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통해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여권 발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 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등록 기간 확대, 재외국민 소급 등록 금지 원칙 명시, 귀국신고 및 재외국민등록말소제 도입 등 재외국민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귀국신고 등이 사실상 재외국민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과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입법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은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동 사건에 가담했던 토오 카츠아키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도를 일본 정부가 압수하고 적절하게 처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일본 정부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동 결의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토오 카츠아키가 직접 범행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등 히젠도가 범행도구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역사적 사실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세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약 78%의 진척률에 머무르고 있는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완료되기 힘든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하에서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 위원을 현행 국회의장 추천 방식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할 때 각 교섭답체에서 추천을 받아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추천에 국회의장의 추천권이 기속되는지 여부, 교섭단체 추천 인원수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통일부 산하의 민간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동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공유재산의 대부,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민간 차원의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법이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하여 첫째, 남북당국 간의 조속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이산가족 대다수가 초고령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김포 맞은편 북측 개풍군 등 한반도 서부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 설치하며, 셋째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와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입

니다.

2018년 5월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생존자의 64%에 이르고 있고,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있어 이동수단이 불편하고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의의 조속한 재개 및 한반도 서부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은 2002년 4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선 금강산 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진전이 없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유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통일부 현안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현안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는 일자리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봉사단 단원, 그건 여러 종류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주영 위원 단계별로 코디네이터도 있고, 여러 단계별로 있는 그 봉사단원들을 내보내는 그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일자리대책이 된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분들의 그런 해외봉사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그런 봉사전문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교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제안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옳은 일자리는 아니지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든 또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륜를 가지고 개발도상국가들에 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개념의 봉사단원들인데, 그게 어떻게 일자리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본래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이주영 위원 봉사하겠다는 개념이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만……

○이주영 위원 그게 왜 일자리로 포장이 돼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원조, 무상원조 사업을 훼손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원조하는 그런 봉사의 개념을 젊은 사람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으로 이게 포장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는 그런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일자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붙잡고 오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봐 버리면 이 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본래 우리 본예산에서 코이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 경험을 쌓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가는 그런 개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이 개념 자체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본래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갖고 온 여기에 왜 그렇게 숭고한 봉사 이념으로 나가는 이게 경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서 나가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속상하지 않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보내는 봉사단의 대다수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원로자문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젊은 나이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일자리를 찾는 데 저희가 적극 지원을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의 한 50%를 저희가 취직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좀 그 퍼센티지를 늘리려고, 지금 커리어 컨설턴트도 여기에 추가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외 봉사하는 거랑 취업하는 거랑 반드시 그게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그런 정신도 현장에 가서 실천을 하면서 또 경험도 쌓으면서……

○이주영 위원 아니,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인력을 되도록이면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잘 준비하고 심의에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주영 위원하고 아주 오래간만에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외교부에서 그렇게 일이 없었어요? 일자리 창출할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짰는데 이것 외에는 그렇게 일이 없었습니까? 외교부에 많이 있을 텐데, 일자리 창출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저희가 머리를 짠 결과는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실제로 이게 중장기적인 일자리 양성 예산이지 단기적으로…… 글쎄, 몇 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한다 그런 것은 얘기되겠는데 아주 시급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 하나만 툭 갖고 왔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단기가 아니고요, 대부분 1년 넘는 봉사활동 자리입니다. 이 중에는 단기인 자리도 있지만 1~2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렇기 때문에 꽤 되는 경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다 더 잘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역시 일자리라는 목표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리고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있지요?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취업상담 컨설턴트 모집 공고 보니까 전부 계약직으로,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뽑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 방침은 비정규직 규제하는 것이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창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코이카 사업에 관리자들의 해외파견 늘리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를 좀 많이 뽑아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분들이 해외 파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제대로 된 봉사도 하고 임시로 와 있는 그분들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을 또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왜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런 것이 한꺼번에 완벽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편성을 해서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확실한 답을 갖고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통일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

혀 없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 이번 추경안에는 통일부 소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남북관계, 통일부 업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오히려 통일부는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바빠서 고민을 아니하신 것 같아요. 탈북자들 취업 문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법안하고 예산 말고 이따가 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예,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현안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최근 해외봉사단 파견 집행실적을 보면 파견실적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견이 적어집니다, 계속해서. 그건 지원자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원래 당초 목표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하는 건데 갑자기 목표를 또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와는 전혀 안 맞는 지금 상향 조정을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추경 수요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해외봉사자 파견이나 수요가,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원자 수는 줄고 있지만……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추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력 공급이나 수요나 이런 것 예측하는 것은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늘어났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외교부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부가 청년일자리 없다고 하니까 각 부처별로 할당 주고 늘려라, 어떻게든지 늘려서 안을 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당하니까 억지로 지금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할당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전 부처 차원에서의……

○이태규 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추계 이것 하던 게, 왜 작년에 추계가 안 됐던 게 갑자기 올 봄에 이게 추계가 되느냐고요. 장관님,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94억인데 전체 추경액 3조 9000억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만 저희 외교부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라’ 이런 기재부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해외파견자 수요가 이렇게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수요는 분야별로 전공분야별로 더 계속 증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규 위원 어디가 증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어 교육 또 사회복지 이런……

○이태규 위원 아니, 그냥 그건 전체 수요에 의해서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전체 수요가 공급자, 공급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높아지는 이유가, 작년에도 그렇게 예측이 안 됐는데 올 봄에 갑자기 예측이 되는 그 타당한 근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직종에 따라서는 수요가 계속 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집이 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보낸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증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응모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예산 받은 부

분에 대해서는 100%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추경 편성이 되고 올해 이 목표치에 미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민혈세가 그냥 공돈으로, 한마디로 겉도는 건데 나중에 그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뭐 예산……

○이태규 위원 이것을 어디, 굳이 이런 소요가 아니라,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 다른 부처에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굳이 부처에 할당된 것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낼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끝나면 여기, 취업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지만 2016년 2월 달에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에서 여기 파견자들 일반 봉사단 파견 끝난 후에 사후관리의 강화 필요성 이런 것 지적받은 바 있고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코이카 봉사단원의 저조한 취업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연 이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맞는가? 아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해외파견·봉사파견 이런 부분을 일자리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그 예산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외교부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부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억지로 만들어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가 외교 잘하면 되는 거지 일자리까지 뭐 그것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도 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컨대 외국에 있는 회사들의 인원모집 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취합을 해서 관계 관심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밖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외교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작게나마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은 하여간 그 목표 달성은 확실하게 지금 장담하고 계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고 또 나중에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불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세금을 그렇게 임의로 주머니 쌈짓돈 하시듯이 꺼냈다 넣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 추가경정예산 구십몇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같은 도전에 직면, 같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유기준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간 예산항목이 원래는 2017년에 1326억인데 2018년도에 1291억으로서 35억이 줄어들었지요? 원래 본예산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봉사지원단 지원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봉사단 인원을 축소하고 또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봉사단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본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35억이 2017년보다 올해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해 온 것을 보면 그 논리를 뒤집고 여기에 새로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해외봉사단을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추경예산 94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게 이번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면 해외봉사단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15년 2589명, 16년에 2357명, 작년에 2130명 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뒤집고 새로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9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대략 한 306명을 더 모집하겠다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06명의 증원 내용도 갑자기 예산을 늘려서 하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갑자기 나올 수도 없을 테고,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자연적인 추세인데 갑자기 어디서 모집할 것이며 그다음에 306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연 한 2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 실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한 15% 정도만 일자리를 얻었어요. 대략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306명이 증원된 상태에서 10%가 들어가면 45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퍼머넌트 잡(permanent job)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일시적 일자리 아닙니까. 장관님, 제 이야기 잘 이해가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해외봉사단 여러 항목에다 해서 306명을 프로그램에 따라 증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궁극적인 일자리를 갖는 사람이 45명 정도가 평균 통계로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94억을 넣어 가지고 45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1인당 2억씩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귀국하는 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커리어센터의 서비스를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0%가 됩니다.

○유기준 위원 자, 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지원한 사람 중에 일자리가 구해지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17년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17년에는 총 이 프로그램에 2130명이 지원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329명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를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통계는, 지금 우리가 306명을 더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서 94억을 넣어 가지고 306명을 증원해서,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봉사단, NGO 봉사단, 과학기술지원단, 다자협력전문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보내는데 그게 306명입니다, 전부 합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한 15% 정도니까 45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45명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94억을 넣느냐, 이런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이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귀국하는 요원들이 한 1000명 되고요, 작년의 경우 1119명이 돌아왔고 그중에 664명이 커리어 안내센터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이 취직을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강 장관님 잠깐만요.

2015년도에도 대략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15년에는 2589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서 293명이 취업을 했고요, 2016년에는 2357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가지고 327명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것 통계가 뒷받침하는 것,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니까……

추경이 절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생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85% 되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가서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45명 때문에 94억을 넣는 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관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한 내용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개발협력 현장을 직접 체득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제안이유에 보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과학기술지원단은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50.9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관

련이 있습니까? 이것을 그런 종목에 포장을 해서 막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그런 아주 시급, 시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은 받았지만 지원자 숫자도 적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중에 예산 사용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세부내용은 KOICA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좀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KOICA 측의 계획으로는 이번에 306명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 내 모두 파견 가능하다 하는, 파견하겠다는 답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쟁률이 높은 한국어교육 또 초등교육, 간호, 관광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해서 확대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긴급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외교부에서 편성해 온 것을 보면 시급성이라든지 곤란한 것을 해소할 가능성 그다음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면 3개 다 해당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한번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더 검토해서 세부적인 답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중복된 내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추경 편성 요건은 결국 자연재해나 경기침체라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한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보면 그러한 시급성이나 또 사항의 중대성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최근 3년간 실적을 보아도 지원자수가 계속 줄었거든요. 사업 규모도 계속 줄어왔는데 이것을 굳이 외교부가 이 시점에서 억지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추경의 실질적인 요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신 지원자가 줄고 있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계속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분명히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메운다는 취지에서 특정 분야에 이 306명의 봉사요원을 더 보내겠다 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영석 위원 지금 현재 금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는 지원자수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KOICA 쪽에서 정확히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KOICA 관계자가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심재권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KOICA 경영기획이사 송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하신 가운데 몇 가지를 답변을……

○윤영석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금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원자수가 증가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지원자수가 작년도, 전년도에 감소했다고 보이는 것은 통계의 착시효과입니다. 원래는 단기봉사단이 포함돼 있었는데 중기나 단기봉사단은 공공재원으로 하기보다는 민간으로 넘기고 이제는 장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 숫자가 줄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자수가 증가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증가가 아니라 목표치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전혀 그러니까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거지요? 지원자수가 폭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없는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상황 변

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목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위원님, 잠시 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늘 청년 글로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가져왔었고요, 그런데 단순 과제로서 해결되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정책 수단을 복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봉사단이라는 진입을 통해 가지고 경력사다리를 만들고 경력징검다리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동원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모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코디네이터나 여기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모수가 늘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재원으로서 늘려나가는 공공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 재원이나 그래서 간접고용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계는 작년에도 800여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명 가운데서 300명이 취업한 것이 아니고 귀국한 1000명 단원 가운데서 KOICA의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career development center)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았던 600명 가운데서 300명이 취업한 통계입니다. 나머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윤영석 위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으로 연결된 것이 KOICA의 해외봉사단이나 개발협력 인재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직종에 취업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직접고용이지요. 그러니까 KOICA의 코디네이터로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약 300여 명이 되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글로벌 일자리로서는 글로벌 개발협력도 있지만 글로벌 무역투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요. 그 관련 분야에 취업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상황의 중대성 이런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런 편성 요건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지원자수도 줄고 있고 방금 KOICA 담당자도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 사업도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지원자수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실제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일자리 창출 추경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우려스럽다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청년들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 하는 기본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 우리 청년들은 해외경험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장의 취직은 아니더라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더욱더 많은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이 편성의 기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또 궁극적인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부처의 청년실업 프로그램에 긴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 궁극적인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4~5년 동안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실업률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 진입을 할 텐데 문제는 남은 4년입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은 안정된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지요. 이것은 그냥 경험을 쌓고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경력사다리를 만들어서 취업 준비과정, 취업 촉진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이것은 임시처방, 그냥 응급처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KOICA에서 요청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는 나름대로 안정된 일자리 같은데, 아까 KOICA 기획이사님 잠깐 좀 나와 보시지요.

보니까 요청을 한 게 1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사무소당 2, 3명씩 파견됐던 것이 고용관계의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파견이 중지돼 버리면서 이 인력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1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예, 원래는 100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줄여 가지고 48명입니다. 사실 여기는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12명과 그다음에 36명이 이번에 추가로 요구됐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경협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송진호 매년 1000명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청년들이 취·창업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개발협력과 직접 관계되는 일자리는 여깁니다. 특별히 또 다자간 기구, 유엔기구나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이 영역이고 수원국 정부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마는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KOICA가 좀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김경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100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력으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후에 개발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인력들은 확보해야 되고 특히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외교부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요.

그동안에 부족한 영사인력 문제 심각하다 계속해서 얘기돼오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모든 각 대사관, 영사관들 쪽에서 영사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영사인력이 과거 연간 200만 해외여행 시대의 영사인력이 지금 해외여행객이 거의 10배로 늘어서 2000만 명이 됐는데 똑같은 영사인력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객들의 안전 문제나 영사서비스들이 대단히 긴요하고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몇 차례 국회 차원에서도 했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는 가운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계기에 많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에 인력이 꽤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9명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저희가 확보해서 배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바로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 상태 그리고 곳곳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사실 이걸 과감하게 요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청년실업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영사인력 문제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턱없이 모자라게 배정이 됐고 또 내년에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이번 추경 같은데 과감하게 요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영사인력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봉사 코디네이터 이런 문제들, 곳곳에 지금 사람이 필요해서 난린데, 일이 안 되는데 이럴 시기에 실제로 제대로 확보해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셨으니 그런 안도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참석자들께서 답변하러 나올 때는 주 답변자이신 두 장관 뒷자리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이상으로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양석 위원께서 대체토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그리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안에 대한 상정 및 회부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윤영석 예결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셔서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28. 현안보고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5시00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북·미 정상회담 관련 동향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선제적·자발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 등을 통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도 면담을 갖는 등 북·미 양측은 회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긍정적 여건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다른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에 대해 북·미 간의 입장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 측은 과감한 비핵화조치와 단기 내 이행 완료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와 핵 위협 제거 등을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각국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중·일 3국은 동경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고려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향후 전망 및 고려사항입니다.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있습니다만 북·미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특정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회담 성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적인 상황하에서도 차분하게 북측 의도를 관찰하면서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에 이어서 북·미 간 추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측 간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비핵화 방안 관련 북·미 간 사전협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도 한미 간 또 남북 간 차원에

서 지속 조율하면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긍정적인 대외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외교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5, 6월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간 사전조율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 관련 북·미 간 현실적인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와의 협력도 면밀히 챙겨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14일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싱가포르 측을 적극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 25년간 달성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한두 번의 회담으로 완전히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후속 협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가면서 향후 남·북·미 회담 추진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추진을 위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통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통일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차분하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즉시 추진 가능, 남북 협의 필요과제, 여건 조성 후 추진과제로 나누어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청와대 융합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이행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한미, 한중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체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평화체제, 소통·홍보, 3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과는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부처별 이행조치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산림협력, 6·15 공동행사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은 산림협력 연구TF, 6·15 공동

행사TF 등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추진 가능한 사안은 정부 내부협의를 거쳐 곧바로 이행 중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4월 23일 0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일에서 4일에 걸쳐 방송장비를 철거하는 등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6·15 남북공동행사는 정부, 정당,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하에 준비해 나가며, 6·15 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판문점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산림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협력은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등은 조속한 기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등을 통해서 북측과 이행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비핵화 과정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틀 안에서 준비하고 남북 공동 연구조사를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중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판문점선언 이행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판문점선언의 발효를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성과를 알려 나감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국회 각 정당을 찾아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여타 관련국과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남북회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북측이 우리 측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의 연기를 통보해 온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본인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해서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상황 관리 및 한미공조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먼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기존 시행 중인 맥스썬더 훈련을 문제 삼아서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연기나 이런 것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됩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제 저희 통일부 대변인 성명 또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마는 판문점선언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민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도 들어 봤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금 이 여종업원 문제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관련 사항을 좀 더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태규 위원 통일부에서 그분들을 면담을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사실은 통일부에서 그동안 몇 차례 면담을 지난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업원들이 어쨌든 저희 정부와는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직접 면담은 못 했었고요.

○이태규 위원 그분들이 정부하고 면담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통일부가 면담을 하는 거를 국정원이 막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정원이 막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태규 위원 지금 이분들의 집단 탈북과 한국 입국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그때도 제기가 됐었고 그런데 제가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확인한 거는 '절대 그게 아니다. 자의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의 입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계속해서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으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하는 게 현재까지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는……

○이태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빨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중요한 상황이고 또 남북관계도 많이 개선되는 전개에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들이 기존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정부당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알아서 조기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명쾌하게 입장을 조속히 발표해 주실 것을 여기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몇 달씩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팩트 체크는 금방 됩니다. 팩트 체크가 금방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의거해서 이걸 풀어 나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끌 사안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면서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다음에 지난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두 분 정상께서 선언 내용 중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뭐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남북 양측이 다 염두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서해안에 어떤 평화구역이 조성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NLL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선언

에서 얘기됐던 이 평화수역에 NLL이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러면 NLL 문제를 여기서 같이 풀어 나가려면…… 저는 NLL 문제를 제외하고 평화수역 문제가 논의된다면 지난번처럼 여야의 논쟁 또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고 이거 합의를 보신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물론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그런 단계에 가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북방한계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평화수역을 만들더라도 NLL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분명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NLL의 변화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은 그런 방향에서 2007년에도 논의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그런 입장에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규 위원 북한은 지난번 2006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도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다룰 적에 NLL을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북한 나름대로 서해5도 통항질서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어 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선과 NLL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 입장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면 서해 NLL은 이번 협의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어로수역이라든가 평화수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만큼 저는 남남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남갈등이 없어져야 남북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동어로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화의 담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또 NLL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안보담론을 우선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화담론과 안보담론이 충돌할 때 현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그걸 예상하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태규 위원 아니 이미 우리가 그렇게 논쟁이 붙고 대립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더 우선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볼 때는 둘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NLL을 유지하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께서 지난번에 기고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펼치셨어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서 동맹의 문제는 동맹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거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양국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동맹 차원에서……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양국이 합의하면 철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주한미군은 한반도뿐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어떤 과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동맹의 핵심 부분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는 섣불리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할 적에 주한미군이 그 이후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가치나 기준은 아닌 걸

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있으면 좋지만 꼭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 뒤에도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질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조윤제 주미대사가 존스홉킨스대학의 한미연구소 소장을 교체하라고 갈루치 이사장한테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미국대사가 민간 대학의 연구소 소장을 교체하라 이런 주장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외교부장관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USKI 소장의 교체 문제는 국회 정무위에서 여러 번 지적된 회계예산 투명성의 문제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였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KIEP는 외교부 산하가 아니고 기재부 산하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조 대사께서 이것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난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질문 순서는 이석하면 뒤로 돌려지지만 우리 강창일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사소위원으로 잠시 이석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오래간만에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발언을 해 주셨어요.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관계 개선에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 덕에 요즘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이슈의 중점에 서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두 분 얼굴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통일부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풍만 불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고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고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저희들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참 많다, 북한도 이해시켜야 되고 미국도 이해시켜야 되고. 제대로 된 운전자도 좋고 중간자도 좋고 어떤 식이든 간에 외교부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속에서 물어봤지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속에서 보여서…… 몸은 괜찮으시고? 몸도 좀 챙기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감사합니다.

○강창일 위원 우리는 비행기 서너 시간만 타도 아주 몸이 죽겠는데 매일 비행기 속에서 살아서…… 원유철 위원님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제 말씀에.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됐어요.

지금 당장 이런 불안요소가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종전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님 두 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더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OICA의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KOICA에서 누가 와 계시지요? 안 계세요?

○위원장 심재권 아마 현안보고 하면서 이석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 질의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외교부에……

○강창일 위원 장관님이 잘 알아서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창일 위원 KOICA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혁신위원회 멤버들이 과거에 KOICA하고

용역을 받거나 계약관계를 맺었던 업체나 단체 소속 임원들이 있어요. 그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러면 이권 챙기는 집단이 되지 않겠어요?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말이지요 KOICA에서 1~2월에 상임이사 공모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혁신위 소속 간사가 또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해서 되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는 혁신위원회의 멤버들이 과거에 용역 맺었던 업체, 단체들이 혁신위원회에 한 네 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혁신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혁신위 간사 하다가 상임이사가 됐어요. 그런 것 외교부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신임 이사께서 아주 큰 뜻을 가지시고 혁신위원회를 다양한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각 위원들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상히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사장께 우려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서면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고치세요. 인사 문제 잘못했다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말이지요 탈북자 문제들, 그분들 그전 정권에서도 제가 늘 지적을 했어요. 탈북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일자리도 마련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전 정권에서도 부탁을 했고 새 정권이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하나도, 일자리 창출하면서 하나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닙니다. 저희 통일부 자체의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고용부라든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예산에, 일자리 창출에 탈북자들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탈북자 취업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일자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뒤에도 저희가 좀 더 그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지…… 현재 지금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항목이 다 짜여져 있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저희가 고용부에서 여러 차원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탈북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고용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지금 고용부에서 일자리 창출 추경을 내놨는데, 항목이 다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딱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직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탈북민분들을 거기에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해 나가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그러면 고용부하고 얘기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각종 회담에서 원칙 없이 억지를 부리고 예측불허와 막무가내 식 언행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이자 불신의 대명사와 같은 나라였고 모든 권력이 포악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지난 93년 NPT 탈퇴 이후에 줄곧 합의에서 선물은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는 파기하는 형태를 반복했던 북한인데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는 과거보다 더욱 제멋대로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예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또 다수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과잉 보도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평화 무드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 안보의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 만큼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를 알려 왔습니다.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무성 위원 북한의 회담 취소 이유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정부는 이번 상황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은 북한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밝힌 사유는 한미 합동 공중훈련과 그다음에 다른 몇 가지 사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북한과 미국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이 작용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것 다 아는 얘기이고,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예상을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꼭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4월부터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국민 앞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은 이미 5월 11일부터 진행했는데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16일 새벽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대폭 양보하도록 중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못된 버릇인 벼랑 끝 전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북한과 상호 협의를 마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안이한 자세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외교에서도 그렇지만 남북 문제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단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동안 북핵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의 생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측에도 뭐라고 장담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전승국이 일방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북한은 핵보유를 했는데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사전 조율 실패로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미·북 간에 거친 말과 또 과거처럼 핵단추 설전까지 오갔던 작년 11월, 12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재자, 중매쟁이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해지고 한미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께 호도했던 장밋빛 환상을 실현하려면 미국에 양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북측에서 완전한 비핵화라 하는 대외적인 공약을 했습니다만 비핵화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미·북 사이에서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북한이 직접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고요.

또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특별히 그 계기로 삼아서 미국과 조율을 해 나간다, 그래서 남북에서 이뤄 낸 비핵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해 낸다 하는 그런 한미 간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꼭 결과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과 비핵화 원칙 합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ICBM 폐기 정도 합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은 실무급 회담으로 넘기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 지원을 받아야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게 되면 또다시 최고의 긴장관계가 다시 연출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으로 경제 지원과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이 집행되지 않는 한 ICBM이나 핵무기를 순순히 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국민 정서는 현재 북핵 폐기 전에는 절대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큰 성과 없이 지리한 밀당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또 남북한 간의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위원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위원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종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개념들은 저희가 좀 나눠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하고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협상 의제로 절대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외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북한 간에 논의될 사안이나 또 북미 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무성 위원 끝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물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1992년도에 합의·발효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 이후에 94년도 미북 어그리드 프레임워크(Agreed Framework)라든가 그 뒤의 9·19 공동성명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저희가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초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원혜영 위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두 부처의 장관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다음 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원혜영 위원 핫라인이 개설됐는데 아직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전화로 통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계기를 지금 청와대와 북측 간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의 과제를 합의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2~3개월은 걸리지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급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년 전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DMZ 내에 있는 궁예도성, 정확한 명칭은 태봉국 도성의 남북 공동발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연말에는 한나라당의 김영우·한기호 의원 또 우리 당의 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또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궁예도성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이런 허황된 꿈이라도 꿔 보자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적인 방향으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기이 물꼬가 트인 게 문화예술의 교류이지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런 역사학자들 간의 공동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북방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남방한계선이 있습니다. 중앙의 자줏빛이 군사분계선입니다. 옛 태봉국 도성지가 바로 북쪽 철책선과 남쪽 철책선에 정방향으로 갇혀 있습니다. 마치 천여 년 전의 궁예가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할 걸 기대하고 건설한 것 같은 그런 예감조차 듭니다.

궁예도성의 바로 우측으로 지나가는 것이 경원선 철도입니다. 서울-원산 철도입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양쪽 철책선 가운데에 출입문을 남북에서 각각 열고 가운데는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물을 짓고, 그리고 우선 지뢰 제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은 우리 국민, 남북의 민족의 가슴만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아마 이것을 지켜보면서, 성서에 예언된바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아마 전 세계의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남북의 분단과 또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메시지는 정말 상징적이고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에 보게 되면 DMZ의 평화지대화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DMZ에 많은 지뢰가 있어서 한꺼번에 전면적인 평화지대화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남북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철원 옛 태봉국 도성지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 정부에서도 철원 지역에, 이쪽 지역에 우리가 DMZ 평화공원을 추진했던 것이 있고 이것이 계속 사업이 이어지도록 올해 예산에도 야당에서 많은 협조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때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합의만 되면 일련의 작업은 지뢰 제거 작업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완화 조치가 벌어지고 바로 이어서 역사의 복원이라는 역사교류의 현장으로서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잘 묶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여기에 '완전한'이라는 것은 영어로 컴플리트(complete)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같이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 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퍼머넌트(permanent)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영구적 비핵화, 즉 컴플리트가 아닌 퍼머넌트를 얘기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강 장관께서는 우리의 목표는 CVID다라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비핵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과론으로 따졌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CVID로 비핵화를 하면 그게 바로 영구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폼페이오 장관이 쓰신 것은 그야말로 그렇게 강한 의지,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이후에 양쪽을 다 쓰고 있습니다. CVID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PVID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비핵화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2005년에 9·19에 다시 명시되었던 비핵화 공약 그리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다시 확인된 비핵화 공약을 다 엮었을 때는 공동의 목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단어상을 넘어서서 확고한 방침으로 합의되고 전 세계에 공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북한이 어저께 자신들이 수정 제안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불과 10시간 앞두고 긴급하게 취소를 한 거지요. 연기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요.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이유를 보면 한미연합 공중 군사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롯해서 그 외에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맥스선더 훈련 때문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이 훈련이 사실 어저께 갑자기 잡힌 훈련이 아니고 이미 한참 진행된 훈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핑계가 아닌가, 또 의례적인 방어적 연례훈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6월 12일 날 예정인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그러한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저께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실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한 전통문을 통해 밝힌

이유가 있고 또 자신들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이유를 같이, 연기한 이유를 함께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1차적으로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동시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오늘 아침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두 분 장관님 다 참석을 하셨을 거고요, 멤버시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오늘 NSC 회의에서도 그 분석 결과가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한 내용 위주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침에 NSC 상임위 결과를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외교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 또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원유철 위원 6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결론을 내렸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원유철 위원 그래서 모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역지사지라는 말도 나오고 또 북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간의 성공적인 회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이 반영된 진정 어린 성공 회담이 돼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회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재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북미회담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중재자 역할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입장,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집약시킨 그리고 관철시키는 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 폐기입니다. 북핵 폐기가 돼야지만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도 증진되고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항상 또 다른 화근이, 불씨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번영이 되는 그런 회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정부가 그냥 '중재자' 이런 표현을 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중재자, 우리가 적어도 중심자 역할 그런 역할은 못 하더라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장관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북한의 이번 고위급 회담의 연기가 북미 간의 협의에 있어서, 사전협의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회담의 기선을 잡고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킴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건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원유철 위원 얼마 전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통화하셨지요? 5월 16일 날.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제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 통화 내용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측의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이후에 대한, 북측 메시지의 상호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평가이고 이것이 향후 외교 일정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을 착실히 준비한다 하는 그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원유철 위원 장관님께서는 6월 12일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북미 정상회담에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재자다 중심자다 적극적 중재자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명칭이 있든 간에 우리 외교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국익 중심의 외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북미가 만나서 핵 문제에 관련해서 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한미 간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언뜻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하나의 검토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볼턴 보좌관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핵 폐기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나시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 폐기가 아닌 현재의 핵 동결로도 회담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요일 모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뜻으로 전해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저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담에 있어서나 여러 소통에 있어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우리 공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흔들림이 없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야말로 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하여튼 두 분 장관님, NSC 회의든 또는 남북 고위급회담이든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이든 간에 모든 회담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한 분의 질의를 더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판문점 회담을 보면서 금년 들어서 진행되는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이 훨씬 앞서 가는, 한반도에 아주 놀라운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기의 의미를 갖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까지 조명균 장관,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여러분들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CVID와 PVID가 같다고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의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석 위원 퍼머넌트(permanent)라는 P 속에는 지금의 해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못 만들게 할 만한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무기에 관련 과학자나 생산 기술자들을 모두 전직시키거나 해외로 이주시키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CVID보다는 PVID가 훨씬 강력한 개념이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과거에 핵을 폐기한 나라들의 전례를 봤을 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에 종사했던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CVID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PVID라고 해서 주는 어감은 훨씬 더 강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정립된

설은 없지만 저 박병석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PVID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구적·항구적으로 다시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기술자를 모두 포함하는 원천적 제거라는 의미에서 더 강력한 개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외교부가 진지하게 평가·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현재 예정으로서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따라서 남북 간 정상의 직통전화는 5월 22일,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북미회담을 앞두고 조율을 위해서 그때쯤 통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강 장관 또는 조 장관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향후 외교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마 순리일 것 같습니다만 막상 어떤 일이 어떤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데 대해서는 또 그 상황이 닥쳤을 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또 두 정상 간의 많은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에 따라서는 핫라인을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위원 조 장관께서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적어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싱가포르회담 사이에는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박병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께서도 거론해 주셨는데 저도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해서 '중재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개선과 달리 북핵의 문제는 국제적 문제, 특히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제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직접적 당사자로서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썼던 '길잡이'라는 용어가 훨씬 정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용어는 길잡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 간단한 코멘트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보다 더 우리 국익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두 가지 상반된 신호가 있어요. 볼턴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다가 생화학무기를 플러스시키고 그 이후에 인권 문제까지 걸칠 듯 말 듯하는 강경책의 입장을 쓰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미국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폼페이오의 두 매체와의 잇단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 대한 원천적 제거,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과거의 핵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의 확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즉 현재 만들어진 핵은 사실상 인정하고 ICBM만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도 주요 미국 당사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약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화두를 가지고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께서 그런 발언도 하셨지만 본인이 또 PVID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CVID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핵 폐기, 완전한 핵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한미가 공동의 목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미국 자국의 이익에 치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즉 골대를 살짝 이동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조율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강조해 드리고요.

또 통일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만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렀어요. 판문점선언 이후에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 성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경호텔 종업원에 관한 논란이 '이미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안긴다' 하는 잇단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국 정부가 이 탈북민에 대한 근본적 성격을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정부는 판문점선언으로 인해서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제대로 잘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탈북민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일어난 그런 몇 가지 보도와 관련해서 '탈북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탈북민들이 그런 쪽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정책을 좀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 문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남북관계의 개선,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대한민국 의견의 통일 중에서 대한민국, 소위 남남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남북 긴장완화 이후에 탈북자들의 추세가 변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긴장완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탈북민 입국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지금 1월 1일 이후의 긴장완화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와는 일단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속개하자마자 바로 보고와 의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꼭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경정예산 의결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 도중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우선 두 분 장관님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우려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상현 위원 장관님,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까, 현재 아니라면?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문제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은 여종업원들은 자유 의사로 와서 한국에 정착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돌려보낸다는 차원의 그런 거를 현재

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없지요? 돌려보내는 것을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관련해서는……

○윤상현 위원 한 번도 없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 북송 자체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이것은 검토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중앙합동신문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을 수차례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신원 노출시켜 가지고 '너 국정원이 꼬셔서 왔느냐, 아니면 자진 의사로 왔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자진 의사로 왔다'라고 하면 이북의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일부 선동지 언론에 따라서 통일부가 같이 춤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슈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냥 빨리 끝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고한 입장을 가져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윤상현 위원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

○윤상현 위원 신뢰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요한 외교 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핵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행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행동을 볼 때까지는 신뢰할 수 없지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행동 이전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 돼야 됩니다. 맞지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판단 근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3년도부터 시작해서 북핵 위기의 역사 25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북한이 핵과 관련된 약속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느냐? 답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한미 전문가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 그것도 한 달이 안 돼서 깼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그 풍계리 핵실험장 거기에 한미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 결국은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면 북핵 개발의 상세한 증거와 어떤 지문이 고스란히 널려 있는 현장을 전문가들이 다 볼 텐데 그걸 보여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2008년도 5MW짜리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같이 한번 보여 주기 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핵 개발 증거 인멸을 결국 비핵화 쇼로 둔갑시키는 거다, 그래서 사태의 본질을 장관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전문가 초청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 어겼지요? 대통령께서 유엔 총장한테 유엔도 협조해 달라, 결국 잘못된 거짓말로 판명이 났지요? 또 고위급회담 한다고 했다가 결국 파기시켰지요? 또 북미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지요. 이게 북한의 진실된 모습이다. 상시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의 약속을 믿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순진한 척하면서, 속는 척하면서 같이 북한에 동조하고 거짓말하는 꼴이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 실패 연혁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좀 특별한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표했고요.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는 냉각탑 폭파하고는,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겠다 하는……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장관님 말씀마따나 냉각탑 폭발 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전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완전한 비핵화 그 말씀을 믿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 말을 그 정도로 신뢰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개적으로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공약을 믿어요, 장관님? 북핵 폐기라는 게 추상적인 그런 신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검증을 하셔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

○윤상현 위원 실제적인 검증을, 결국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못 믿는 상대를 검증하고, 검증하고. 마크 내퍼 대사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디스트러스트 앤드 베리파이(distrust and verify),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확실한 검증 방법이 뭡니까? 장관님은 그게 공약이다, 실천될 것같이 얘기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허구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북한이요, 예를 들어서 완전한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엄격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정 장소에 어느 때든 아무나 사찰팀이, IAEA나 미국 사찰팀이 들어가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허용을 할까요, 북핵 개발의 모든 실상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북한의 온갖 만행과 범죄 행위가 녹아 있는데 그것을 다 까발릴 수가 있나? 그것은 체제의 붕괴를,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는 뭐냐 하면 완전한 사찰입니다, 사찰.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넓은데 핵무기를 어디에 숨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엄격한 특별 사찰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서울 면적보다 더 넓은 정치범수용소에 묶어 놓고 그것을 특별 사찰이나 엄격한 사찰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완벽한 사찰 없이는 불가능하다, 완벽한 사찰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는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속성상 완벽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는 허구다, 결국 판문점 선언이 허구·거짓 선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장관님 열정은 좋은데 속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북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미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확실한 검증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미 간에 조율해서 서로 일치된 의견을 북한하고 해서 확실한 검증 방법 그리고 확실한 타임테이블, 폐기 종료 시점까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북핵 폐기 종료 시점을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미국 하는 대로 따라가야……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사이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이 있을 거고요 또 한미 간 또 남북 간 조율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 폐기에 있어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봐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룬다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확실한 검증 방법, 확실한 타임테이블을 만드셔야 된다. 완전한 비핵화 말만 있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데 지금부터 우리 국내에서 먼저 김칫국을 먹고 있는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한 미군 철수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방귀 뀌듯이 얘기하지를 않나, KMPR의 특수작전 헬기 사업도 취소하지 않나,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소위 말해서 북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도대체 이게 정부의 역할인가? 제가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장밋빛 전망에 있으면 안 된다.

두 분이 NSC 상임위 멤버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서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룹싱크 때문에, 집단사고 때문에 한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님들의 어떤 노력·열정에 정말로 최대의 찬사를 보내지만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유념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참고로 판문점 선언은 하루에 양 정상 간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아주 공히 환영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90개국 이상의 환영·지지 성명이 나왔고요 그것이 20개 이상의 정상 차원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우리 앞의 어떤 낙관에 빠져서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본 여러 주요국도 이것은 의미 있는 결과다 그렇게 평가를 해 줬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

(16시37분)

○위원장 심재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결소위 심사가 완료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다시 현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 진행 중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청년실업문제 완화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해외봉사단 사업 중 과학기술지원단 10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1380억 93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임에도 이렇게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윤영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외교부의 추경예산이 과연 추경 편성의 목적에 맞게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소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적어도 이번에 저희가 처리해 주는 이 예산이 추경인 만큼 추경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외교부장관의 약속을 받고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외교부장관 말씀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이 있으신 후에 외교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우리 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이카 봉사단 그리고 개발협력 인재 해외 파견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직접 체득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이 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논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잘 유념해 주셔서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8. 현안보고(계속)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6시45분)

○위원장 심재권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아까 계속했던 현안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오랜만에 두 장관님을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더 많으실 테니까 몸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실무적인 질문을 좀 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맥스썬더훈련을 이유로 해서 고위급회담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전통문은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고 북한의 조선통신이 발표한 것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순전 맥스썬더밖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로 제시한 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노골적으로 판문점선언을 위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맥스썬더가 판문점선언을 위배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저희가 짐작컨대 판문점선언에 보면 육지라든가 해상, 공중 등 어느 공간을 통해서도 상대측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 그런 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항을 북측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이수혁 위원 판문점선언 제2항 1번에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고 나옵니다. 연례적인 우리 한미군사훈련은 제외한다 하는 양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 조항과 관련해서 딱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 차례 다른 계기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북측에서는 우리 한국이 연례적으로 한미가 실시하는 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양해한다 하는 것이, 그런 입장에서……

○이수혁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전면 중단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제외한다면 이 조항이 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행위는 도발적 행위로 돼 있는 거지요, 적대적 행위. 어떤 행위를 상정하고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서 한 것은 상대측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적대 행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일단 그런 조항을……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인 한미훈련은 이 조항의 '적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금 해석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 목적의……

○이수혁 위원 그러면 질문이 어떤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거냐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 목적의 그런 군사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 여태까지 그런 행위는 연평도 사건 그런 건데, 우리가 북쪽에 한 행위는 뭐였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기는 합니다만 서로 그런 식으로 총격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였다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아마도 북한은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보도에서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는 이유로 이 훈련을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지금 그 조항을 걸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배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 분야를 죽 해 온 사람으로서 좀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해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 대담을 통해 연례훈련은 무방하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었다 하는 걸 가지고 어떠한 연례 군사훈련도 이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좀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제가 몇 차례 읽어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우선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계관은 CVID조차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CVID 주장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묘한 표현을 하면서 CVID를 배척하는. 그런데 도대체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어떻게 다르기에 앞에 컴플리트(Complete)만 쓴 것이 V, I는 무시하고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왜 CVID를 북한이 갑자기 그런 식의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배제를 하는…… CVID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다른 걸로 북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외교장관께서……

○이수혁 위원 외무장관께서 설명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도 그 담화문을 잘 분석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사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안 썼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북한의 기존……

○이수혁 위원 아니, 판문점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판문점선언에는 썼습니다만 이 담화에는 안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담화에는 안 나오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조차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수혁 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이의하면서 아주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CVID는. 그러니까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는 좀 다르게 북한은 해석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담화에 나온 얘기가 막상 우리가 북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거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CVID는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CVID는 우리 과거의 6자 회담 기록들을 보시면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북한이 CVID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계관 자신이 수석대표로 와서 한 얘기를 또 뒤엎는 건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북한 측이 요구하는 거였는지 우리가 제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김계관은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해서……

CVID 약어가 제가 처음 만들었다 해서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때 사전적 의미는 아무 데퍼니션(definition)이 없었어요. C는 뭐고 V

는 뭐고 I는 뭐다 하는 개념 정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퍼머넌트(permanent) 한번 집어넣어 보지 그랬느냐 해서 다들 웃고 그랬는데, 이게 용어 개념이 없이 지금, 이 CVID는 법률적 용어도 아닙니다.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고 순서도 막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CVID라는 약어를 쓰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순서도 그 순서대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컴플리트라는 한 단어만을 픽업해 가지고 씀으로써 제가 볼 때는 혹시 베러파이어블(verifiable), 검증 가능한 것은 검증을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후 문제가 김계관의 담화에는 분명히 있어요.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를 종결하면 핵 폐기하겠다 하는 거고, 여태까지 한미 양국은 선 핵 폐기, 후 적대행위 폐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후의 문제가 지금 미북 간에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가요? 아직 북한은 선 핵 폐기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담화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미북한 간에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런 걸 이 상임위에 좀 말씀드리실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동시적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하는 겁니까? 폐기하고 적대행위 중단하고는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핵 폐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적대행위 중단은 그냥 선언해 버리면 끝나는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교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까지는 아마 장소, 시간 문제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수혁 위원 정상회담?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핵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지금 막 우리 이수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나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김계관이가 찬물을 팍 끼얹어 버렸습니다. 판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역시나 북한이구나, 북한은 못 믿을 나라로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져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조 장관한테 한 번 질문하지요.

최고위급회담 제의는 북한에서 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고위급회담은 아시는 대로 판문점선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고……

○서청원 위원 그래서 그 후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제의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서로 간에 일정을 조율 중에 북측에서 16일 날 개최하자라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6일 개최하는 걸로……

○서청원 위원 맥스썬더훈련을 한 지가 어저께 5일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서청원 위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나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회담 이후에 한미 간에 통상적인 연례 훈련은 아무런 제재 없다, 그런 논의한 일이 없다, 상관없다고 해 놨는데 그걸 트집 잡았어요. 그리고 태영호 공사를 트집 잡아서 회담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고 정말 저놈의 나라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한 것 아닙니까? 현실화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배경은 뭐냐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북한의 김계관 성명 내용의 진위가 뭐냐……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북측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전에 외교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의제와 관련된, 비핵화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북측에서 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이유를 그거밖에 못 찾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북측이 전통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가장 북측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측이 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거기에 지금 저희는 무게를 두고서 보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강 장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서청원 위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이를 만나고 와서 강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서청원 위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폼페이오하고 김정은이하고 평양에서 회담에 관한 얘기의 어떤 문제, 말하자면 비핵화 부분의 어떤 부분까지 접근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일이 있었습니까, CVID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폼페이오 장관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이 큰 메시지고요.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청원 위원 예?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미 간의 그런 중요한 대화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을 밝히는 것은……

○서청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큰 틀에서 CVID 같은 것은 해결됐는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율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리고 어저께 김계관 성명 이후에 강 장관, 폼페이오하고 통화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폼페이오하고 통화한 바로 뒤에 김계관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계관 담화까지도 고려한 통화는 아니었고요. 북한의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통보에 대한 상황 평가였습니다.

○서청원 위원 오늘 아침에 NSC 소집해서 이 문제들을 다뤘지요?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차분한 대응이 어떤 겁니까, 조 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문점선언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것을 차질 없이 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남북 간에 또 한미 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청원 위원 북한이 25일 날 핵실험장 폭파한다는 것 그리고 기자들을 초청한다는 얘기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계관이가 어저께 얘기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지금 북한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에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속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정부가 속도를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 장관?

○통일부장관 조명균 개성공단 재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서청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북한과 미국의 6월 12일 날 회담에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의 문제까지 조율하고 그리고 유엔도 다 제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흘리고 이거는 나는 별로 좋지 않다, 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실질적인.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정부라든가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저희로서는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 가지고 한미 간에, 유엔하고 관계에 우리가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파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는 정부가 남북 고위회담을 할 때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원이에요. 경제 지원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이 있어야지요. 그

런데 너무 지금 이것저것 많이 벌여 가지고 어떤 돈으로 어떻게 북한을 돕겠느냐 하는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옵니까? 국민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져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평창의 겨울을 통해서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내고 그 일을 하는데 정부가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잘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완성해 냅시다 하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물어볼 것은 지금 북한이 남북 간 회담을 무기 연기를 해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끝난 것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도 조사해 보니까 여섯, 일곱 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회담이 연기된 일이 있었는데 그 회담을 연기는 했지만서도 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난 건 아니다 하는 제 생각과 의견이 같으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김계관 부상의 입을 통해서도 일부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얘기한다면?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무래도 북한 나름대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북측의 입장을 좀 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북측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일 미국에서 하루는 존 볼턴이, 하루는 폼페이오가 여기저기서 말들을 하나씩 던지는 얘기들이 보면 하나같이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되겠는데 먼저 싹 폐기해라 그러고 나서 보자 하는 투의 말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이런 연기 사태가 있게 되기까지는 맥스썬더 연합훈련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전략자산을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 F-22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레이더에도 포착 안 되는 초현대적인 전투기 아닙니까? 그것 8대가 전개됐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정확하게 그쪽 분야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아마 작년 하반기에 F-22 두 대가 휴전선 바로 접경지대 부근을 한번 밤에 돌았다는 게 기억에 있어요. 그런데 8대가 동시에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보입니다.

실은 이게 북한으로서는 엄청 불안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맥스썬더 자체가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방어냐 공격이냐, 더구나 이렇게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전폭기의 경우에 방어냐 공격이냐의 경우는 불과 1초 차이밖에 안나는 겁니다, 결심을 바꾸면 방어가 아니고 공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태영호 씨 문제, 국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갔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여야 없이 우리 국민 전체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향한 길은 살얼음 딛듯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디뎌야 된다고 보고 이런 때는 상당히 우리가 여러모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판문점에서 풍선 몇 개 밤 중에 미리 날렸습니다' 이런 거 보도되고 이런 것 보면 참 철없다 생각이 들고 또 태영호 씨 부분들도 지금 이 시국에 와서 국회에 불러서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태도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해서 협상을 하자는 게 지금 현재 정국 아닙니까? 협상을 하자는 건데 미국에서 요즘에 한 마디씩 내뱉는 말을 보면 마치 무슨 점령군이 하는 얘기처럼 내뱉어 버리니 북한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는 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의견을 얘기하고 이번 맥스썬더 훈련에서도 F-22 8대나 전개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말렸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라고 발표만 하는 게 우리 정부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평화로 접근하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또 양쪽 입장을 서로, 오늘 저희가 NSC 상임위 결과 발표하면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표현도 청와대에서 쓰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초에 미국 가서 만나고 다닌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 뒤에 11월 초에 중국을 가서 외교 당국자들, 푸잉 외사위 주임—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위원장이지요—그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국교 열었을 때 공로가 있었던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등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금년 2월 초 러시아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외무 당국자, 국회의원들, 상원 외교위원장도 만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조언을 구해 봤어요.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핵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리비아 얘기를 합니다. 리비아 카다피 얘기를 해요. '북한은 리비아가 미국과 영국 말 듣고 핵 폐기를 했는데 그 뒤에 카다피가 죽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후세인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확고하지 않으면 핵 폐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대체로 뭐냐 하면 '그건 미국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한국이 앞장서고 국제사회에서 이중삼중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하고 핵전쟁하면 자기들이 폭망 할 걸 모르나요? 그까짓 거 미국 전력의 몇 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걸 쥐고 있어야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핵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쏘면 맞는다는 걸 자꾸 보여 주려고 미국에 대해서 ICBM 핵실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든 북한의 불안감을 덜어줘서 '핵 폐기해도 너희 안 죽는다' 이걸 믿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 하면 리비아 카다피 죽는 걸 봤다는 얘기를 도처에서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북미회담 앞두고 나오는 얘기들이 리비아식 해결 방법이 보도가 되기에 제가 속으로 뜨끔뜨끔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리비아식 리비아식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핵 폐기 완전하게 해 놓고 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방송 보니까 '리비아식으로 먼저 폐기 다 하자고 한다'고 김계관이 그랬나요? 뭐라고 항의성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을 어떻게 죽여 버릴까? 일부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협상을 성공시키자는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때로는 자제도 시키고 때로는 중재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정부가 잘해야 돼요. 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해내리라고 보고, 6월 12일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한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엊그저께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리비아식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식 방식을 리비아에 대해서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볼튼도 리비아 방식을 통해서 핵 폐기한 것과 카다피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석현 위원 그게 미국 쪽 설명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핵 폐기, 그 밖에 화학무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폐기를 한 다음에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몇 년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가 내전으로 빠져들면서 그래서 카다피의 운명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리비아 방식 말고도 핵 폐기를 한 경험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모델을 보면서 이래서……

오늘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리비아식도 아니고 트럼트식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결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하나, 저는 평화협정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볼튼을 배치하고 폼페이오를 배치하고 하니까 '야, 이거 협상하자더니 강성을 배치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누구였습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은 좋은 얘기만 하고 트럼프가 작년에 군사 옵션 군사 옵션,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미국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형사들처럼 투캅스입니다. 굿 캅, 배드 캅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트럼프는 장사하던 사람이라 사업하듯이 항상 협상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틸러슨으로 하여금 굿 캅 역할을 시키고 자기가 배드 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군사옵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폭격 안 합니다' 이러더라요. 결과적으로는 폭격 안 했어요.

제가 1분만 해도 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가 위원장님을 거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난 이번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반대로 보는 거다, 말하자면 배드 캅을 앞세워요. 폼페이오, 존 볼튼을 앞세워서 북한에 대해서 막 내질러.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도 막 과시하면서 압박도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마지막에 뭐 하나 양보해 가지고 회담을 성사시켜서 노벨상 받을 생각이 속으로 있나 보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굿 캅 하려고 하는 구나, 발표할 때 나는 딱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한 희망을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외교 당국이 잘 노력을 해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6·12 북미회담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야, 지자체 전날 북한이 민주당 도우려고 그런다', 6월 12일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87년 6월 12일은 레이건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베를린장벽 앞에서 연설한 날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르바초프님, 당신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또 자유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번영을 원한다면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오' 라고 선언했는데, 2년 만에 장벽이 무너졌어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역사 깊고 의미 있는 날이 6월 12일이라 그날로 합의한 거지,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지자체 표 많이 받으라고 6월 12일로 했다, 홍준표 대표의 말씀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걸로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통일부장관께 여쭙니다.

어제 새벽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나온 거지요? 고위급회담 중지, 일방적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먼저 그 전에 새벽 0시 30분에 우리한테 전통문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주영 위원 전통문이 오고 그리고 보도가 나오고……

그런데 그 전통문과 보도 속에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선더' 그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 외에 또 비난을 하고 나온 게 뭡니까?

김계관 담화문에 나오는 볼튼 등 해 가지고 고위 인사들 발언, 거기에 CVID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그리고 태영호 공사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보도에 나온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태영호 공사 얘기도 고위급회담 중지해야 된다는 근거로서 나온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표현은 애매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고위급회담 중단과 관련해서 죽 언급하면서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그 전통문에는 태영호 공사 얘기는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 와서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그 요지가 어떤 건지 다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장관도 잘 아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내용은 맞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6월 12일의 미북정상회담은 아주 포장이 잘된 핵 폐기·비핵화를 선언하면서도, 계속 들어가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단계에서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핵군축으로 풀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건 예측이니까 100% 꼭 이렇게 된다고 장담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얘기다, 태영호 공사란 사람은 북에서 김정은 자신을 다 겪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점도 태영호 공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또 외교부장관께도 같이 여쭙니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측에도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태영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상당수 있다 하는 의견을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뭐 국민의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우리가 미국하고 소통할 때는 소통합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김계관 담화나 태영호 공사의 전망 이런 것에 따르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 거기에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배석하셨으니까 그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이것은 CVID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두 정상도 그런 개념과 그런 과정들을, CVID는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김계관 담화가 어제 고위급회담 중지 통보를 하고 나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CVID 이런 거 이런 얘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 CVID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뭐예요? 김계관 담화에 나오는 CVID 이런 주장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는 한쪽 면만 얘기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주영 위원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

게 뭡니까? 이게 부정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만 얘기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로 제시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북한에 대한 적대성……

○이주영 위원 아니, 그것은 조건들이고요. 비핵화의 조건들이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영 위원 상응하는 보상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조명균 꼭 보상이라기보다 북한으로선 당연히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저희가 같이 놓고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계관 담화는 어쨌든 북미 간에 본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 제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의 담화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주영 위원 개인 명의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부분……

○이주영 위원 그걸 개인 명의라고 하지만 북에서 그렇게 독단적인 개인 명의의 성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체제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북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주영 위원 이것은 북의 입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서 나온 성명으로 봐야 돼지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은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동결이 됐다', 북핵에 대해서는 동결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지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동결이라는 말이 그 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조금 낮은 단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일시중단이니까. 동결은 영어로 번역하면 프리즈(freeze)이지요. 외교장관, 그렇게 다들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다른 개념인데 4월 21일,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행조치라고 당중앙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핵실험 안 하겠다. ICBM 시험발사 안 하겠다. 담보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이랬으면 이게 동결입니까, 모라토리엄(일시중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은 일시중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인용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하지 않겠다' 해서 계속적인 조치로 일단 북한은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동결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에서 동결이라고 할 때는 영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핵 생산시설을 가동 중단시켜야 이게 동결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모라토리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동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장거리미사일……

○이주영 위원 아니, 동결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주영 위원 있다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장관께서는 4월 27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 이것은 동결이 아니고 일시중단이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야 옳지요. 개념을 정확하게 대통령께도 입력을 시켜 드렸어야 옳은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만 어쨌

든 북측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이 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내각에서도 같이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현안질의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질의나 그것을 기초로 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가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밖의 루머나 가짜 뉴스 아니면 전혀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질의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평화올림픽의 성공에서부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확정까지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통일부·외교부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비핵화 평화체제 완성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상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에 암초가 있을 것이다, 걸림돌이 있다, 방해 책동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프로세스를 성공시키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암초로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반도에 화해나 평화체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기 판매업자겠지요, 아무래도.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서 여기에 무기를 좀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군산복합체, 무기 판매업자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남북관계가 대결하고 긴장 상태로 가야지 여기서 이념장사 또는 종북타령 이런 게 잘 먹혀서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 별로 썩 한반도에 화해나 평화체제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이념의 구도 이것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도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식이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뻔하니 알면서. 그리고 한방에 해결하라, 조급하게 성급하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판을 한번 깨 보자 이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합의를 가능한 한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게 있지요. 이것을 저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선 전단을 매달아서 대북 살포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에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확성기도 철거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했으면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한테만 이행하라가 아니라 우리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행을 해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벌써 통일됐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와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분단의 상황이 남아 있는 것이고 교류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것이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핵화 문제 최대의 걸림돌이 검증이 될 텐데요. 이 검증 문제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가지고 상당 정도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의 해법은 신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이냐, 신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문제가 담보

되지 않으면 결코 비핵화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레임은 검증이냐 아니냐, 100% 할 것이냐 99%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이 문제를 성사시키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북전단 살포 문제 그다음에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지요. 물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과.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잘 스스로 관리하고 남북 간의 관계에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13명,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던데,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혹시 이 류경식당 종업원이 집단으로 탈북해서 입국하고 나서 통일부에서 이 종업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최근에는 만났습니다만, 작년도에 몇 차례 시도했을 때는 탈북 종업원들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성사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 번도 만난 적 없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최근에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전달해 준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탈북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도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접촉 차단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누군가가 중단에서 접촉을 차단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경협 위원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서 만나는 것도 또 역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그런 것을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 중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때 이게 국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수사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언론에 인터뷰한 대로 기획탈북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동안에 좀 다른 탈북자하고 다르게 북한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았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에서 몇 차례 제기한 것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이 여종업원 문제 때문에 무산됐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무산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것 정말로 아주 지금 국제법 기준, 인권 이런 차원에서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 확인하는 것

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언제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앞으로 아마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 여야 위원님들의 이런 견해의 차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믿지 마라 또 정말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혹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우리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멈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이것 때문에 남북회담을 반대하는 또 전쟁을 좋아하는 집단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족 대결에 환장한 쓰레기 집단이다.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 히스테리적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노동신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당 추미애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정당정치 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땅의 정당이 아니라는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국론 갈등, 남남 갈등에서 과연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남북관계, 북·미회담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져 봅니다. 초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당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그냥 무시당하고 가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또 NSC에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치권도 제발 이 문제만은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야, 보수·진보 모두 초월해서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여야는 이렇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답변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지 성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은 없었지만 '왜 자유한국당은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 이런 의미가 혹시 내포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장관도 그랬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또 야당을 건너뛰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좀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남북관계, 새로운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 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런 국제정세가 맞았기 때문에 또 김정은의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호기를 맞았다고 보는데요.

국내적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생각했던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건너뛰면서 또 야당은, 한국당은 소위 그런 것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기록상에 내가 이 말은 남겨야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속지 마라' 혹은 '다시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 장관도 우리를 무시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떠드는 것이 남북협상에 정말 걸림돌이 됩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세현 장관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당을 사례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국회에 가서 비준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야당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니까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 달라'고요. 오히려 야당의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 다른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당을 건너뛰고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장관들,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NSC에 들어가시면 대통령도 비준동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야당 설득합시다', 야당에게도 좀 설명해서 같이 가는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요즘 보니까 나는 우리 통일부장관이 그래도 여러 가지 실세인 줄 알았는데 국정원이 다 한다고 합디다. 그래도 국내 정치에 관해서는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래, 미워도 김영철 온다고 할 때 이것 야당에 통보해 줍시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혹은 판문점 회동 때도 '홍 대표 부릅시다' 이런 상상력이 안 됩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무슨 제도적 봉쇄 장치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비준이요? 통일부장관님, 2007년 10·4 선언 비준할 때 청와대 보좌관으로 계셨지요? 비서관으로 계셨습니까? 아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판문점 회담이 어떻게 비준동의 대상이 됩니까?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 10·4 선언도. 그 자체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법제처와 노무현 대통령의 법무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총리들의 후속 조치문 그것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비준동의안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5개 분야의 8개 사업이 있었지만 예산액도 없이 냈어요. 추정하기로는 11조에서부터 60조까지, 지금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지금 또 비준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야당을 이렇게 해 놓고 정말 국회에서 동의받을 그런 염치가 있는 겁니까?

달라졌다고 한다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르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그런 지지율로 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나는 내가 이 문제에 비준동의 나오면 장관님과 앞으로 이 과정에서 적어도 총대를 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저는 맞서 갈 겁니다. 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소위 이렇게 백지수표에 그냥 국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또 야당과 협치 정신은 없어지고 이래 가지고는 통과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는 집단 또 남북 대결을 통해서 이념 장사하려는 집단으로 호도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역사에 우리 기록을 '그래도 그때 보수 야당이 정말 과거의 행태를 봐서 옳은 지적 했다' 저는 그런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비준동의, 또 요즘 이렇게 야당이 소위…… 외교안보에 있어서 초당적이라는 말을 제발 쓰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시하지를 말든지, 어떻게 가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거봐라. 야당 무시하니까 잘 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되어야지요, 남북관계를 위해서.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기회에 야당도 살펴보고 국내 여론도 분열을 좀 막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었습니다마는 비준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입장이 달라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입장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정양석 위원 2007년과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2007년과 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저희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남북한 간의 중요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어떤 바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법적 근거 잘 따져 보시고 나중에 오면 다시 논의합시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합니다마는 협치,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열심히 가세요. 잘 가시면 되지요. 그러나 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장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선언을 좀 문제시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게 국제사회에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원님분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의견이 국회에서 이렇게 나와 주시는 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다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임을 또 보여 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으로 성공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2개의 평양발 보도와 담화 이런 것들이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그리고 김계관 외무부상의 담화 이것이 현재의 정세에서 전략적 교착 국면 이런 것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술적 교란 정도로 그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로서는 이게 어떤 차질을 빚는,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략적 교착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전술적인 교란으로 이렇게 조장……

○통일부장관 조명균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인영 위원 해소되어 나간다? 해소되어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서로 계속 절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조선중앙통신사는 주로 남쪽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계관 외무부상의 메시지는 주로 미국을 향해서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조선중앙통신사의 그 보도는 맥스선더(Max Thunder)도 있고 태영호 공사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맥스선더 자체가 11일 날 시작되었고 풍계리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12일이고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F-22 이런 것들도 요컨대 지난 달 29일에 들어와서 1일에는 시험 비행도 한 것으로 알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정황적 측면에서 그냥 태영호 공사 문제나 맥스선더 문제만으로만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수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적대 행위의 전면 중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F-22라는 전략 무기가 출동한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B-52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추가적으로 맥스선더 과정에서 운용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물론 그랬지요. 그리고 15일 보면 미국에서 미니트맨3 ICBM 시험 발사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적대 행위와 관련해서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간다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예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 예년 수준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되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연례적 수준의 방어 훈련으로서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넘어간다 북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만 이렇게 한 번 소리 확 지르고 그냥넘어갈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조금 안일한 정세 분석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어적 훈련으로서 연례적 수준의 것과 북이 생각하고 있는 예년 수준 이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지 전술적 교란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계관 외무부상의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비핵화의 정책 추구 이런 과정이 폼페이오냐 아니면 볼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하는 수준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정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 아니냐, 주문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볼턴이 얘기하고 있는 '핵 폐기 전에 제재 해제 없다. 선 포기하고 후 보상하는 것이다. 핵·미사일 넘어서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도 완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유의 것과, 그다음에 명확하게 폼페이오와 서로 협의하고 조절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조율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게 한꺼번에 될지 아니면 단계를 좀 구분해서 연속적으로, 아주 연속적으로 그 단계를 묶어서 협상안을 만들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핵동결·핵감축 이런 것과 제재 해제, 경협 시작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단계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CVID) 이렇게 되는 것과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 북·미 수교까지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여간 연속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열려고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문제는 예를 들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던져진 메시지는 통일부장관께서 잘 해결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후자의 문제는 외교부장관께서 유념하시면서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미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대화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가 물론 핵심이겠습니다마는 이 비핵화 과정을 중점에 두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떤 로드맵을 경과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미 간의 전략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돈해 나가야 된다, 그냥 비핵화 하나로만 놓고 이렇게 가기는 저는 좀…… 그렇게만 가서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한미동맹 이런 것들의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확실히 우리가 주도하면서 공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면서 우리가 공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비핵화 수준을 넘어서 예컨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평화협정 포함해서 이런 것을 가면 남·북·미가 함께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 전체를 잘 역할분담도 하고 한미동맹 과정에서 전략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교란 요인은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그때그때 하늘에 기대서, 운에 기대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교란 요소들이 발생할 때 대처해야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장관님들 의견……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해 주신 여러 가지 분석과 관전평,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전략대화가 그 결정판이 어떻게 보면 북·미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폼페이오 그리고 또 우리 안보실장께서는 볼튼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소통 내용이 비핵화만은 아닌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회담 그리고 그 이후를 생각했을 때 비핵화, 물론 중요한 의제이지만 그 비핵화를 포함하는 평화 만들기 또 미국과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또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 얘기만 그동안 죽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체제안전 보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거

의 얘기가 나오지 않은 측면에서 어제 북한 김계관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제기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주는 계기였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다 저희 염두에 두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 긴밀하게 더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조명균 장관님, 북한이 갑자기 남북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를 해 왔고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표한 것과 김계관 제1부상이 발표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조선중앙통신사의 내용을 보면 이유를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한미 군사합동훈련하고 두 번째는 아마 태영호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이전부터 계속 하던 것인데, 또 자기들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천명까지 했던 것인데 그것을 새삼 거론한 것은 이것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두 번째,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들의 눈엣가시이고 또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이는데, 자신들이 말한 것을 보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쓰레기'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쓰레기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 필요없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무시를 해야지, 왜 이 말을 크게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인지 저는 그 의도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는 특별하게 어느 하나를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북한 간에 개최가 합의되었던 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저희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전통문으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연기 통보한 것은 판문점 선언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유기준 위원 공식적으로 논평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공식적으로 논평하고 북측에 또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신문에 하나 나온 것이 있던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발언을 했다면서 북한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그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부산일보에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거야말로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주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용주의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끌어안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은 협상이 아니고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미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이 말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또 앞으로 비핵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갈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이런 말을 지금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핵폐기 또는 비핵화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혜택은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그렇게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천명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자기들 속내하고는 아마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리비아하고 다른 점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리비아는 핵보유 단계에 있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리비아 모델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 내심의 의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미국이 더 이상 쓰지 말고 핵을 북한이 쓰겠다 그런 말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북한과 미국과의 수교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화협정으로의 대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제조건을 성취시키고 그다음에 비핵화 또는 핵폐기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이 적대시 정책 폐기 그다음에 체제 안전보장 이런 것은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봐야 나올 것 같고요.

○유기준 위원 아니,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명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과 공갈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이것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담화에 나온 내용하고 막상 미국하고 그 협상에 들어갔을 때 북측이 추구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당장 미국하고 북한이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 미국은 바로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당장 당신들이 그동안 적대시한 그런 정책들을 포기하는 그 증거를 내놓고 그다음에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텐데 협상장에서부터 벌써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배가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첫째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지금 말하는 게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북한은 쓰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인정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핵보유국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서 그다음을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낙관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담화 자체가 북한의 협상 입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유기준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강 장관님, 이것을 북한의 제1부상 김계관이가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지요.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북한이 정말 잘하는 살라미전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커뮤니케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기본이 안 되고서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참고를 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론으로 임하는 것은 나중에 어쩌면……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잘못하면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해라 그런 말을 제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강 장관께 뮌헨안보회의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 장관께서 참석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죽 했는데, 저보고 좀 뒤끝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그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이 회의는 속성상 회의 조직자들이 택하는 초청자 이외에는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은, 장관이 원래는 초청의 대상이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대참을 차관에게 이야기를 안 하면서 우리의 외교 당국자는 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2018년 뮌헨안보회의에 갔던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는 릭 페리 에너지부장관을 대신해서 부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틸러슨—전 장관이겠습니다—전 장관도 참석을 못 하고 부장관 존 설리번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에너지부장관이 참석을 못 하고 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참석 대상자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의 외무차관이 장관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자, 그러면 장관님, 그때 이 표현을 갑자기 내가 물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 대상자가 참석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 차관들은 도대체, 부장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참석을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각 케이스의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유엔에 있었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유엔에 고위직이 초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못 가는 상황에서는 대개의 경우 대참이 되지 않는 그런 회의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기준 위원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보충질의 안 하십니다.

○유기준 위원 예.

장관님, 그때 말씀하신 취지는 '그 참석 대상자가 참석을 아예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차관을 거기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외교 1·2차관이 다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장관이 참석하고 차관까지 참석한 이란의 경우도 있고 장관이 참석 못 해서 부장관이 참석한 미국의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강 장관이 그때 답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국회에서 모르고, 살펴보지 못하고 답변했다면 그것도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그 발언을 거두어들이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게 좋지, 그때 장관께서는 뭐 했느냐 하면…… 그때 뭐 하셨지요, 안 가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때……

○유기준 위원 재래시장 방문 안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재래시장 방문했지요, 마포?

○외교부장관 강경화 평창올림픽 계기로 여러 정상들이 방문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준 위원 평창에도 가고 마포시장 탐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설날 연휴 때 우리가 늘 하는 일입니다.

○유기준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발언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끌고 나감에 있어서 정확히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입 닥치고 따라오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과도하게 의욕이 앞서거나 막연한 환상을 국민들께 심어주는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러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자꾸 반평화적이다, 반통일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주 독자적인 발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위 판문점선언 이런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쌍방 간의 그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부장관님, 판문점선언 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이 판문점선언에서, 상당히 긴 선언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들도 결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윤영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 문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쌍방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의견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술핵을 비롯해서 핵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한 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물질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물질 또 북한의 핵무기 시설 그리고 기존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문점선언상에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이 정부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분명히, 당연히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상대가 있는 만큼 북한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남쪽에는 전혀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은 본인들이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북한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으로 그런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남북 간에 또 협의가 돼서 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 북한이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전략폭격기 이런 것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을 해 왔는데 그러한 것을 내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북한의 기존 입장이 이 판문점선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92년 그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결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남북한 간의 합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영석 위원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에도 판문점선언에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제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가져왔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한다고 북한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북한은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남북한 간의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기본적인 우리 측의 취지 또 북한하고 저희가 합의한 그런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윤영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초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굉장히 애매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의 지금 답변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2년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부장관께서도 결국은 소위 판문점선언에서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그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가 된 거라고 했는데 그 합의가 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한의 비핵화, 대한민국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애매하지가 않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이 의미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것이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것이 포함되면 다른 것도 포함되는 것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자꾸 쳇바퀴 도는데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시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선언 이후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일방적으로 '미국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한 것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장관님께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또한 미래에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핵물질들 그리고 핵무기 제조시설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 이외의 대량살상무기들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국 정부에 주장을 하고 또한 미·북 정상회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핵무기 물질·시설은 완전히 폐기돼야 된다 그리고 검증이 따라야 된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미회담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놓고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오히려 결과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것은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현존하는 이러한 핵무기와 또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완전한 폐기를 하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현재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남북철도 또 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북한의 철도를 정상화하는 데 몇 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한 83조 정도 소요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지원은

결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되는 것이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만 가능하다……

○윤영석 위원 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가 진전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제사회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대북제재 레짐(regime)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국제사회의 완전한 동의, 완전한 선언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을 걱정했어야 됐는데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물론 4·27 판문점 선언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을 이끌어 내신 두 분 장관님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또 격려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맥스선더 훈련이 언제까지 계속되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23일에서 25일로 예정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25일 사이에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맥스선더에 대한 문제 제기의 상황 속에서도 핵실험장 폐쇄가 제대로 되리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까지 거기에 어떤 다른 변화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고위대표단 방북했을 때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북한에서 양해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나름의 노력도 함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독수리 훈련의 기간도 평소 연례적으로 두 달 정도 했던 게 한 달 정도로 축소됐고 또 이어서 키리졸브 훈련도 2주 정도가 열흘 정도로 축소된 이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대단히 중요한 비핵화 과정의 하나다라고 보면서 맥스선더 훈련도 우리가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계관 부상 기고문 그리고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를 보면서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NSC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부도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갖는 국익 그리고 핵무장에 있어서 북한이 가져왔던 국익, 나름의 국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접점을 찾도록 서로 노력하고 또 우리 정부도 함께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말 올바른 서로 간의 관심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계관의 성명을 보면서 CVID에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의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계관 부상이 발언한 보도된 전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러니까 즉 그것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이를테면 그런 CVID에 해당되는 것 리비아식 무슨 생화학무기 폐기 등등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4·27 선언에서 합의했다고 할 때 그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은 저는 북한 역시 CVID의 개념으로 보고 다만 그것이 북한 나름으로는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김계관 성명에서도 후반 부분에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단계적·동시적을 벗어나서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큰 틀에서 같은 의미라고 보고 우리 정부가 상호 간의 입장이 함께 존중되도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핵화 과정에서 사찰과 검증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찰 문제, 검증 문제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찰과 검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쓸모없는 그런 한반도 상황, 동북아 상황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동안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한 그런 유일한 예는 사우스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스아프리카는 그렇게 할 때 바로 더 이상 핵무기를 갖는 것이 사우스아프리카의 안전이나 어떤 체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이 핵무기가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핵무기가 쓸모없어지는 그런 한반도 상황 그런 북한의 위치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사찰이나 검증보다 더 근본적인 비핵화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십분 공감하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역시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상호 존중 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렇게 해서 모두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길래 그냥 질의를……

네 분씩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신청이 됐네요.

지금 6시 32분입니다. 6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던 우리 남북관계에 지금 잠깐 제동이 걸렸는데요, 고위급회담이 중단, 연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남북 간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도 역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시기인데요.

이번에 북이 연기시키는 데 이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맥스선더 훈련과 그다음에 태영호 기자회견을 들고 있는데 탈북외교관 태영호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니까 '국회 마당에 내세워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태영호 공사가 정부의 보호대상이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보호대상인지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정한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정착지원법상 '통일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정원장이 보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태영호는 국정원장의 보호 결정에 따라서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게 또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장관님이 보시기에 국회에서의 출판기념회, 기자회견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기본적으로 태영호 씨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북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혹시 태영호 공사가 외교관으로…… 밖의 영국 공사로 있었지요, 최종?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나가 있던 기간이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경협 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외교관 활동으로 밖에 나가 있었던?

상당히 오래됐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기록에 남길 정도로 기억하지 못해서……

○김경협 위원 햇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밖의 외교관 생활을 꽤 오래했다라고 알고 있고, 혹시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공사로 있을 때 북한 내에서 서열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도 저희가, 서열까지 파악될 정도의 인물인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김경협 위원 영국대사관의 공사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서열이 어디 순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참 밖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서열을 따질 수 없는 정도지요. 아마 우리 대사관의 공사직 정도를 감안하면 얼추 이해가 갈 텐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책을 쓰고 거기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죽 봤더니,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폐기쇼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이나 전략 이런 것을 다 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북한이 자기 손에 딱 들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북한의 어떤 핵전략이나 비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는데 그런데 책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태영호 공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태영호 씨도 아마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권력서열 몇 위 내에 있어서 일정 정도 북한 최고지도부의 어떤 전략이나 핵대응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기라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장기간 체류했던 외교관이 여기에 와 가지고 책을 썼다고 마치 북한의 전체 핵전략 자체를 전부 다 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정말 정부의 보호대상이면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초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 악용하는 것도 안 좋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대상이면 보호대상답게,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탈북 여종업원들은 다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보고 의견이라도, 의향이라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람은 안 되게 다 막아 놓고 여기 이런 양반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 정부에서 이런 탈북자에 대한 관리기준이나 특히 정부 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보호대상과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와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정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보호가 대상이나 보호의 여러 가지 방법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호의 목적이 그분들이 뭐를 하게 하고 못 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 여종업원을 만나는 것을 저희가 막았던 것도 없고요, 태영호 씨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보호·관리 그런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를 국정원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윤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윤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당 간사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위원장 심재권 잠깐,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질의 내용에 관한 우리 윤 위원의 의견은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발언을 좀 취소하거나 정정을 해 달라는 그런 발언을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정식으로 그 부분은 우리 윤 위원님 발언 시간에 의사표현으로써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저는 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학적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냉각탑 폭파할 때에 이게 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재처리는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재처리를 다 했거든요, 플루토늄 더 생산해 냈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하든 봉쇄를 하든 폐기를 하는데 그것 없더라도 핵무기는 더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왜 핵실험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핵실험장이 아직도 북한은 필요한 겁니까, 더 만들려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과학적 어떤, 원자력계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까? 내가 그 과학적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이게…… 저도 그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이수혁 위원 그런데 NSC에서 그런 전문적 검토를 안 하는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옮길 만큼의, 또 그런 것이 조심스러워서 말이지요. 이게 여기서 제가 답변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답변은……

○이수혁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것을 치밀하게 보도를 하거나 그런 게 안 보여서 저 같은 사람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수혁 위원 과거에 냉각탑 그런 게 없었으면 또 믿겠는데 냉각탑 폭파해 놓고도 계속 재처리를 그 후에 또 했다는 말이지요. 해서 플루토늄 더 생산해 낸 것 아닙니까?

이제 핵실험을 안 해도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실험할 것 다 실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폭파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가? 냉각탑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비판하는 쪽은 그것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성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호기심과 의문이 지금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도훈 본부장은 좀 아십니까? 기술적이고…… 아니, 핵실험장의 폭파가 가지는 의미를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래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예.

○이수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안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또 현안하고도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외교관의 역량이 약화가 되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여러 이유들이 있겠지요—외무고시의 폐지 그리고 외교관 선발시험이라는 그 긴 이름, 이 제도 이름의 변경 때문에 응시율도 낮아지고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낮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여러 경로로 최근에 입부한 사람 또 국립외교원 통해 가지고 외교관 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간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와 엇비슷한 생각을 해요. 시골에 가면 뭐,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내 아들딸 급제했어' 하는 얘기를 못 한다, 고시라는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느 의원을 지적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제 외교관 선발시험이 7급 아니에요?' 하는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외통위 안에. '7급 뽑는 것 아니야?' 그리고 제 집의 아파트 위층에 모 대학교 외교학과 다니는 4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고민을 한대요, 그 어머니가 딸하고. 이것 외교관 선발시험을 봐야 될지 행정고시를 봐야 될지 고민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름도 그렇고 지금 외교관들의 지위가 낮아져 가지고 누가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구를 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외무고시에 응시한 사람들 또 그 후에 외교관 선발시험 응시한 비율, 또 1차 시험 PSAT의 성적이, 외교관 선발시험 응시생들의 PSAT 평균 점수가 낮다는 겁니다, 행정고시보다. 옛날에는 더 높았는데 이런 역전 현상 이런 것이, 다 이 제도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지…… 그러면 행정고시도 이름 바꾸지, 행정고시·기술고시 놓아두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외무고시나 외교관 선발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기술고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자료를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상당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태영호 공사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북한의 고위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영호 공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판을 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그런 헌법상의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반헌법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협 위원 정부의 보호 대상이거든?

○윤영석 위원 보호 대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권이 있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보호를 제대로 받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보호 대상이면 보호를 제대로 받아야지요.

○윤영석 위원 그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심재권 질의답변은 우리 두 분 부처 장관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김경협 위원 아니, 누가 재갈 물리라고 했나?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정부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제도 자체의 취지가 그분들을 뭘 어떤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안보나 위해나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윤영석 위원 제약을 해서도 안 되고 재갈을 물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

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윤영석 위원 더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지금 북한의 그 담화예요. 우리 정부가 방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정간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정간섭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이 조선중앙통신에서……

○윤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지 한마디도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 대단히, 이것은 아주 중대한 그런 발언이고 아주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이것 취소하십시오, 발언하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태영호 공사의……

○윤영석 위원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김경협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을 지키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답게!

○윤영석 위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심재권 자, 김 위원, 지금 윤영석 위원 질의하고 계십니다.

○윤영석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담화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발언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의 그러한 움직임, 탈북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개입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마저도 뭔가, 그야말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유경식당의 13명의 탈북,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분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부의 백 무슨 대변인입니까? 지금 발언한 게 말이지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탈북을 했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인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탈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방송에서 이 보도를 보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면 북으로 돌려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백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뭔가 전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윤영석 위원 이것 사실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송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온 내용에……

○윤영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안 읽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것은 풀 텍스트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가서……

○윤영석 위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말이지!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니,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좀……

○윤영석 위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안 읽어 봤습니까? 그러면 반박 자료를 냈어야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사를, 정확한 풀 텍스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윤영석 위원 그러면 반박 자료를 내야 됩니다.

정정보도 요청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그 기사를 지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있고 또한 이 당사자인 13명의 탈북자들은, 탈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을지 그것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경솔한……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여기 이미 저희가 보도·

해명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내비친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 보도·해명 자료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사실이 아니다 그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윤영석 위원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여러 차례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북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 자체까지도 안 간 상황입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북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저희들이 해명 보도를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북으로 송환을 원하면 돌려보낼 의향이 있느냐?' 그런 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답변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래서 잘못된 보도라고 저희가 바로 보도·해명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두 분 장관님, 오늘 이 시간이 아마 20대 국회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또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지고 또 여야가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 남남갈등 현상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가 되면 북한 경제를 먹고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그렇지만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 돈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걱정되는 것이 청구서가 결국 우리한테 오겠다……

바로 그게 우리가 94년 제네바회담 끝에 소위 대북 경수로 사업의 전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북·미회담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경수로 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뭐, 할 일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약 3조 5000억, 70% 부담으로 되었는데 공정률 35%에 끝나 가지고 1조 400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자가 약 9000억. 그래서 2조 3000억이 지금 정부 부담으로 남아 있고, 통일부가 매년 8000억에서 1000억씩 이자를 우리 예산으로 지금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폼페이오 말 들어 보니까 또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것 말고도 10·4 선언에서 또 대북교류라든가 북한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우리 부담으로 크게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을 대비하고 있느냐, 이게.

그래서 NSC나 또 저기가 안 들어오겠지만 이번에 액수가 적지만 이런 추경, 외교부나 통일부의 몫이 배정된다고 한다면 멀리 내다보는 장관님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옛날처럼 '국채 발행해 가지고 빚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시고, 나는 이것 미국하고 대화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도대체 그러면 북한에 지원해 주는 비핵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200억이 들 것이다, 100억이 들 것이다, 국내 기관도 많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세금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장관들이 비밀리에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하고 또 예측하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간곡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 이런 문제는 또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실제로 비용을 분담, 이자

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앞으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경협,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이런 측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거기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러한 경협이 북한에만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단지 몇 억만 되더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 사전 협의 없이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무슨 말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장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법 개정도 안 되었고, 이번에도 올림픽 과정에서 많이 썼지만 단 한 번도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 나중 논의합시다.

문제는, 내가 말한 것은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미·북 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가령,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미 협력된 것 있으므로 미국이 어떤 협의해도 우리 못 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제가 좀 없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또 길게 논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끼느냐 마느냐 가지고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통일부가 많이 고려한 것 같다 하는 뉘앙스가 전문가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해서, 북한의 입장을 거들어서 중국을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데 우려가 있고요.

북한의 입장이 또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 게 바로 탈북 여종업원 논란입니다.

이것은 좀 각도가 다르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소위 국정원에 적폐청산TF가 만들어져 가지고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6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15개 항목 중에는 이 여종업원 문제가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TF가 끝날 때도 7개의 의혹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기로 했지만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니까 통일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언론보도와 북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는 소위 아까 그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찬성, 통일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미 협정이 끝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설도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 종전선언, 앞에 부분……

○정양석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여종업원 문제이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외교부하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다른 것 없으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시간이 좀 없는데……

아니, 센다이 총영사나 오사카 총영사 여기는 지금 어떻게 대통령의 보은 인사가 가는 겁니까? 아니, 정말 외교관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드루킹과 관련된 사람이 전부 그 자리를 노렸다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좀 창피합니다마는 베트남 김도현 대사—경고 조치하셨다고 들었는데—'이번 협상이 잘 된 것은 친미적인 외교관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에 발탁된 것은 그동안의 박해에 대한 명예회복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베트남 대사가 제가 알기로 외교부에서 그래도 차관보나 차관급 이상 선배들이 가는 기수에, 굉장히 외교관 기수도 낮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근무했어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인사,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또 오사카 총영사에 오태규 위안부TF 보내셨는데, 들어 보니까 그거예요. '나 일본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나 여기 가겠다' 아니, 위안부 문제 가지고 그렇게 껄끄러웠는데 그런 분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낸 것이 적당한 인사입니까?

장관님,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세요. 이분들이 너무 버겁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현 대사, 버거운 존재예요? 아니면 오태규, 장관님이 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청와대가 한 겁니까?

이렇게 외교관 인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관장 인사는 대통령님의 결정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을 올리고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어떤 안은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어떤 안은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셔서 내려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다 검증을 여러 번 거친 그런 분들이십니다.

오태규 총영사께서는 위안부TF위원장을 했지만 그 TF위원장을 한 것도 일본 문제에 있어서 기자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TF도 맡으셨고, 또 TF를 맡았다는 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추천을 한 바입니다.

○정양석 위원 일본 정부가 좋아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 정부……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교하러 보낸 거예요, 아니면 싸우러 보낸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대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외교부 또 기재부 또 삼성, 민간기업에 있으면서 두루두루 전문성을 겸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 협력관계에 있어서 특히 기업들의 많은 활동이 있는 베트남에 있어서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하는 판단으로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셨고 또 저희도 적극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파견을 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인사 문제가 정리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두 가지만 좀 짤막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체제 보장하고 평화체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포함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또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전제조건이 되고 선행단계가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우리 정부 입장 중에?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일단은 주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인영 위원 왜 그 문제가 외교부 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인영 위원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제적 협상을 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교부가 일단 주무부서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영 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기 때문에 다 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무부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조건 혹은 단계의 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정부 입장이?

이게 지금 밖으로 나타나기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한꺼번에 동시적인 전망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정리된 입장이 있냐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판문점선언에 있는 그대로 종전선언은 올해 안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만듦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간의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분위기 만들기 차원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겠다 하고 판문점선언에 이렇게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협정은 그야말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한 그리고 여태까지 법률적인 의미를 감안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정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여쭈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북미 수교 문제는 좀 다르지만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평화협정 문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라든가 개념이 그렇게 꼭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중국도 관련된 거잖아요.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또 중국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3자 또는 4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중국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저는 좀 있어 보여서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역할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운전자론도 있고 지금 많이 이야기된 게 중재자 이런 표현도 있고. 조정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또 북미 간에는 보증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좀 종합화된 어떤 표현을 쓸 건지.

그동안에 운전자로서의 이런 어떤 표현들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중재, 보증, 균형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조금…… 오늘도 좀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다소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치명적으로 혼란스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개념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 정말로 소중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가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질의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의 국익이, 그 이익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서로 어떤 부딪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조화롭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제로섬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로섬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윈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윈인의 과정에서 통일의 문제도, 남북 간의 앞으로의 발전 문제도 역사에,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발전에 맡깁시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제로섬 접근이 아니라 윈윈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선택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강창일 위원,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다면 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이 있었다면 모두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안보 및 대북 현안들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언과 함께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창일	김경협	김무성	박병석
박주선	서청원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이석현	이수혁	이인영	이주영
이태규	정양석		

○청가 위원(1인)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한국국제협력단 경영기획이사	송진호
통일부장관	조명균